KIEP 북경사무소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한중경제포럼
제18-06호 2018년 12월 27일

중국경제의 안정적 변화와 개혁개방의 가속화

2018년 제5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중국경제의 안정적 변화와 개혁개방의 가속화
2. 일　시: 2018. 12. 4(화) 16:00~18:00
3. 발표자: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웨이자닝(魏加宁) 연구원

1. 장 · 중 · 단기 관점에서 본 중국 경제 추세

❑ 장기적 관점: 잠재성장률 하락

- '뉴노멀(新常态)'의 이론적 근거
- 인구 보너스 효과의 소멸
- 기술혁신 부족
- 자본/산출 비율의 상승
- 환경제약 강화

그림 1. 중국의 잠재성장률, 실질GDP, 5개년 규획 목표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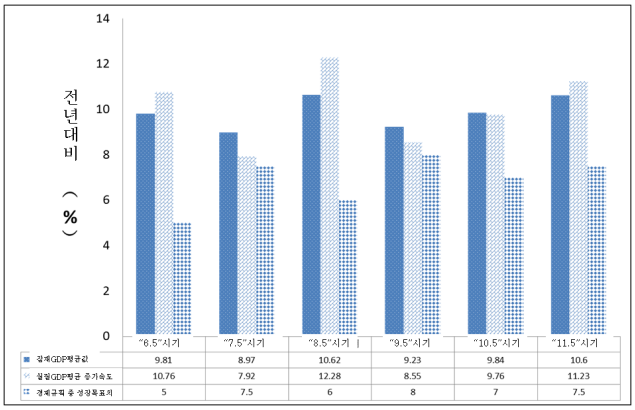


그림 2. '13.5'시기 잠재성장률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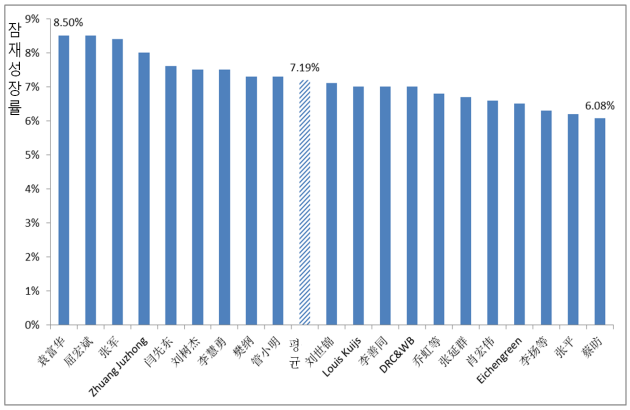


표 1. 중국정부 및 주요기관·학자의 '12.5' 시기 중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단위: %)

유형	기관명	추정년도	잠재성장률
해외기관	세계은행	2009	8.40
	미국 경제연구소(NBER) (B. Eichengreen)	2011	6.50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 (관즈슝(关志雄))	2013	6.00
	아시아개발은행 및 북경대학 공동	2014	8.00
	평균		7.23
정부기관	중국인민은행 조사통계사	2011	9.11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세계은행 공동	2012	8.6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2012	8.76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2012	8.25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	2014	7.50
	평균		8.44
비정부기관	HSBC (취홍빈(屈宏斌))	2014	8.50
	모건스탠리 아시아	2012	8.30
	평균		8.40
학자	장옌췬(张延群), 로펑(娄峰)	2009	8.30
	위안푸화(袁富华), 장핑(张平)	2011	9.00
	리산퉁(李善同)	2012	7.90
	샤오훙웨이(肖宏伟)	2014	7.68
	판강(樊纲)	2014	7.30
	차이팡(蔡昉)	2014	7.19
	장쥔(张军)	2014	8.40
	평균		8.01
잠재 GDP성장률 평균			8.05
실질 GDP성장률 평균			7.86
"12.5" 규획강요 성장목표			7.00

- 지난 40년간 중국경제의 성장동력

◦ (대외개방) 외국기업과 자본 유치를 통해 성장함. 단, 국유기업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답보 수준임. 향후 개혁이 없다면 외자가 떠나게 될 것임.

◦ (기술혁신) 휴대전화가 일반전화를 대체하고, 알리페이가 금융기관을 대체하였음. 그러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이뤄져야함.

◦ (규모효과) 타오바오 등의 온라인 쇼핑은 효율성 제고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효과를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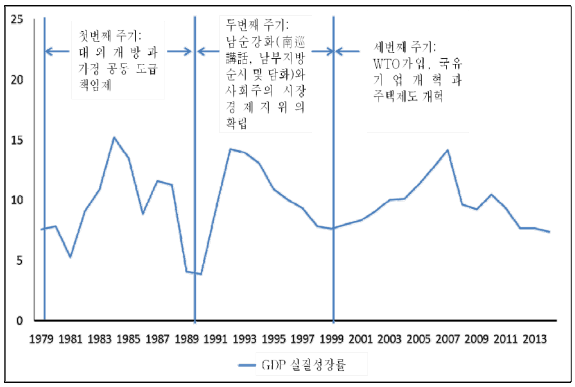
❑ 중기관점: 주기적 요소

- 주기는 영원히 존재
  - 1991년 미국에서 '신경제'가 등장하고, 학자들은 모두 더 이상 주기가 없을 것으로 단언하였음.
  - 주기는 시장경제 뿐 만 아니라 계획경제에도 존재하며, 정치적 주기를 반영함.
  -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주기는 단기, 중기, 장기 순환(파동)으로 구성됨.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추진이후 40년간 3개 주기를 겪음.
  - 80년대 첫 번째 주기에는 주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함.
  - 90년대 두 번째 주기에는 주로 사용 문제(가전제품)를 해결함.
  - 00년대 세 번째 주기에는 주로 주택과 교통 문제를 해결함.
  - 현재 직면한 주요문제는 교육, 의료, 양로 등임.

표 2. 4가지 경제주기

명칭	기간	원인
키친 순환=단기 파동	40개월 내외	재고변동
주글라 파동=중기 순환	10년 내외	설비투자 변동
쿠즈네츠 순환	20년 내외	건축투자 변동
콘드라티예프 변동 =장기 파동	50년 내외	과학기술 혁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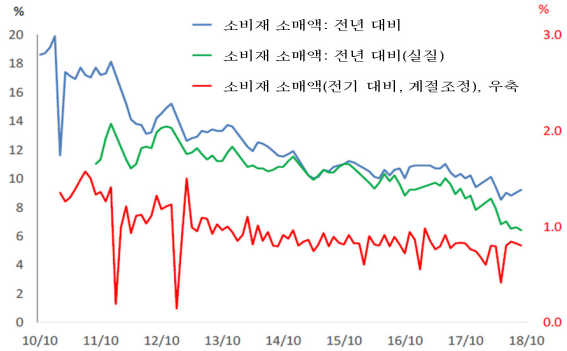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3대 개혁주기



❑ 단기관점: 거시환경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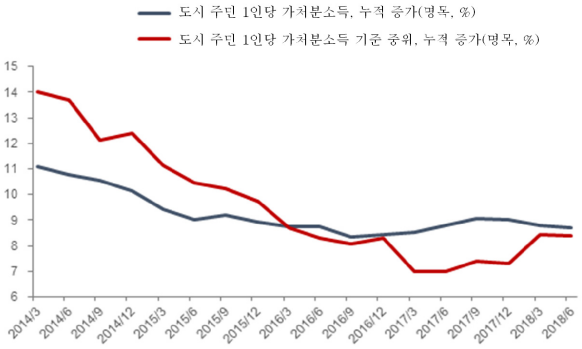
- 소비증가율 지속 감소
  - 중국의 소비증가율은 △ 공금소비(公款消费, 공금으로 물건 구매) 감소 △ 민간소비 정체 △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권리 박탈 △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민 소비수요 억제 △ 세수 증가율의 개인소득 증가율 상회 등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 기록
  - 현재 청년층의 56%는 저축하지 않고, 과도한 소비를 지속
  -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8년 2/4분기 기준 신용카드 6개월 이상 연체액 규모는 전기 대비 6.3% 증가한 756억 6,700만 위안을 기록함. 이는 2010년 연체규모 76억 8,900만 위안 대비 8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그림 4. 소비재 소매액 증가속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5.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속도



자료: WIND, 중타이증권연구소(中泰证券研究所)

- 투자증가율 지속 감소
  - 2018년 상반기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기여도는 0을 기록함.
  - 외국기업은 투자환경 악화로 인해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不想投), 민간기업은 시장신호 모순 등으로 인해 투자를 유보하며(不敢投), 국유기업은 레버리지율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임(不能投).
- 순수출 둔화
  - 9월 수출증가율은 6.5%(전월대비 3.3%p 하락), 수입증가율은 14.1%(전월대비 5.9%p 하락)를 기록했으며, 2018년 상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11%를 기록
  - 2018년 수출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대외무역 추세는 대체로 예측에 부합하거나, 예측보다 좋은 양상을 보였음. 중미 무역분쟁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음.

표 3. 신용카드 연체액 및 보유 추이

시기	신용카드 연체액 (6개월 이상)	1인당 신용카드 보유수(장)
2018년 1/4분기	711.4억 위안	0.44장
2017년	663.1억 위안	0.39장
2016년	535.6억 위안	0.31장
2015년	380.2억 위안	0.29장
2014년	357.6억 위안	0.34장
2013년	251.9억 위안	0.29장
2012년	146.5억 위안	0.25장
2011년	110.3억 위안	0.21장
2010년	76.8억 위안	0.17장

그림 6. 중국의 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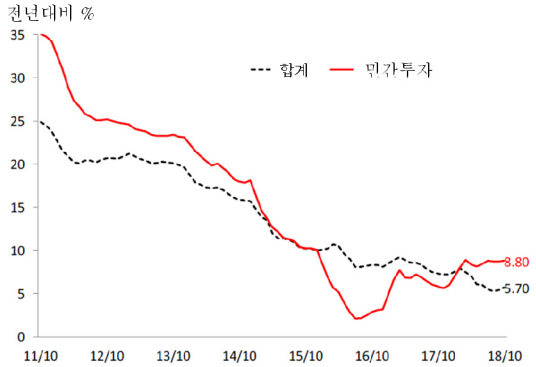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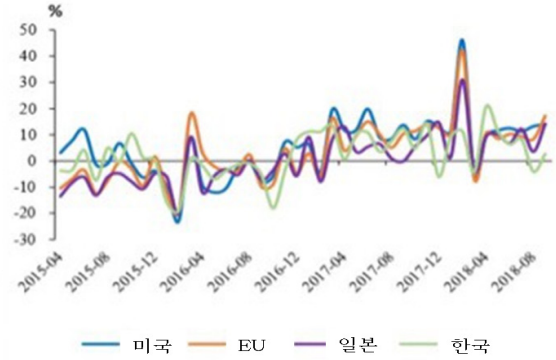


그림 7. 수출과 수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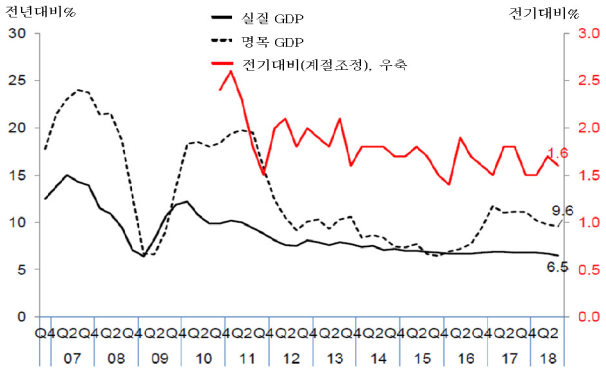
그림 8. 주요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율



❑ 통계요소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1분기 6.8% △ 2분기 6.7% △ 3분기 6.5%) 속도는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중국 GDP는 13개 분기 연속 6.5~6.9%의 안정적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음.

그림 9. 중국 GDP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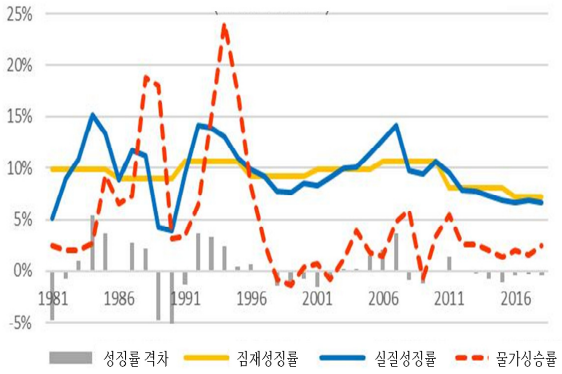
2. 경제추세 판단과 거시정책 방향 변화

❑ 경제추세: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 '뉴노멀(新常态)'의 이론적 근거
  - ◦ 인구보너스 감소: 로봇 보너스, 지능화 보너스, 디지털화 보너스로 대체 가능 여부
  - ◦ 기술혁신 부족: 대학교 체제 관료화, 연구체제 행정화, 학술문제 정치화
  - ◦ 자본/산출 비율 상승: 국진민퇴, 비합리적인 자원배치, 대량 대출자원이 국유기업에 유입되면서 자본효율이 하락
  - ◦ 환경제약 강화: GDP를 기준으로 한 정부평가, 운동식(运动式)[1] 환경보호
-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임.
- 실업문제가 사회 안정 위협
  - ◦ 하이난(海南)성에 소재한 싼야시(三亚市)는 '헤이룽장(黑龙江)성 싼야시'로 불릴 만큼 다수의 헤이룽장 사람들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헤이룽장을 비롯한 동북3성의 고용창출이 적었기 때문임. 아울러 일본이나 한국 등지의 여행사 관련 서비스 업종 종사자 중 상당수가 동북3성에서 온 것임.
  - ◦ 그 외 기술혁신으로 인해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출현하면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어 고용창출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임.
  - ◦ 중국의 실업문제가 중남미 국가처럼 심각해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로 집에서 인터넷만 접속하거나 하는 일종의 은폐된 실업이기 때문임.
  - ◦ 이러한 은폐된 실업 역시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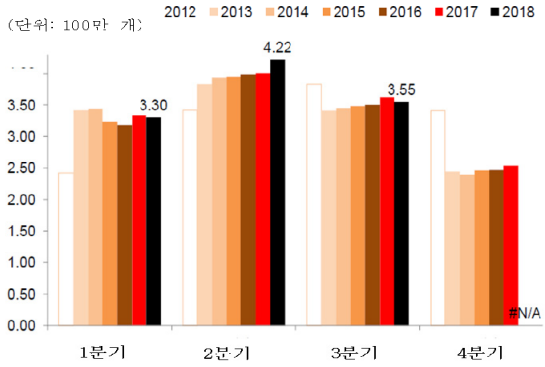
1) 정부가 문제 해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일종의 캠페인

그림 10. 잠재성장률, 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1981~2018)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11. 도시 신규 고용창출(2012~2018년)



자료: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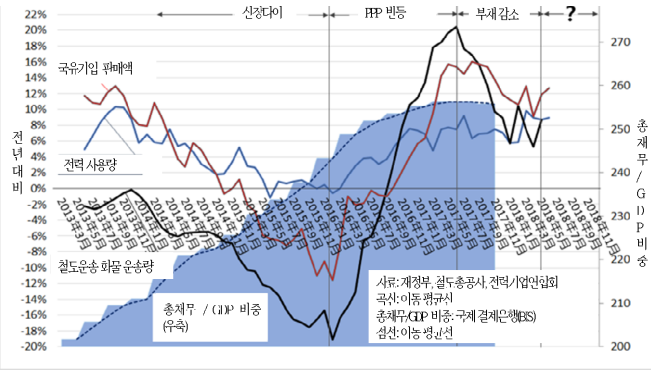
❑ 거시정책 방향 변화

- 현재 중국의 거시정책 운용에 대해 학술파, 전통파, 개혁파, 실천파 별로 의견이 나뉨.
  - (학술파) 잠재성장률 둔화, 인구보너스 소멸 등 뉴노멀에 대해 개혁이나 경기부양책 실시 보다 금융리스크 방지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입장
  - (전통파) 경기둔화 위험을 충분히 주시하지만, 재정과 통화투입 통한 경기부양책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개혁파) 재정과 통화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반대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추진하기 어려움.
  - (실천파) 한편으로는 경기부양책 실시, 다른 한편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현재 중국 정부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한편 개혁을 서두르지 않고, 기본환경이 바뀌지 않을 경우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점점 줄어들 것임.

표 4. 거시정책 운용에 관한 4가지 정책 주장

		체제개혁	
		개혁안함	개혁
거시정책	미부양	학술파	개혁파
	부양	전통파	실천파

그림 12. 자주 바뀌는 경제정책



자료: Tsugami Toshiya

- 정치국 회의를 통해 본 최신 정책신호와 추세 판단의 변화
  - 2018년 7월 31일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① 안정적 고용창출(최우선, 사회안정 관련) ② 안정적 금융리스크 관리 ③ 안정적 대외무역 관리(무역전쟁 및 무역적자) ④ 안정적 외자관리(신뢰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⑤ 안정적 투자관리(신규 프로젝트) ⑥ 안정적 예측관리(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전문가 좌담회) 등 '6가지 안정(六稳定)' 방안 실시가 결정됨.
  - 2018년 10월 3일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추세 판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현재 중국경제는 안정 속에서 변화 중이나, 경기둔화 압박이 증대되고 있어 '6가지 안정' 유지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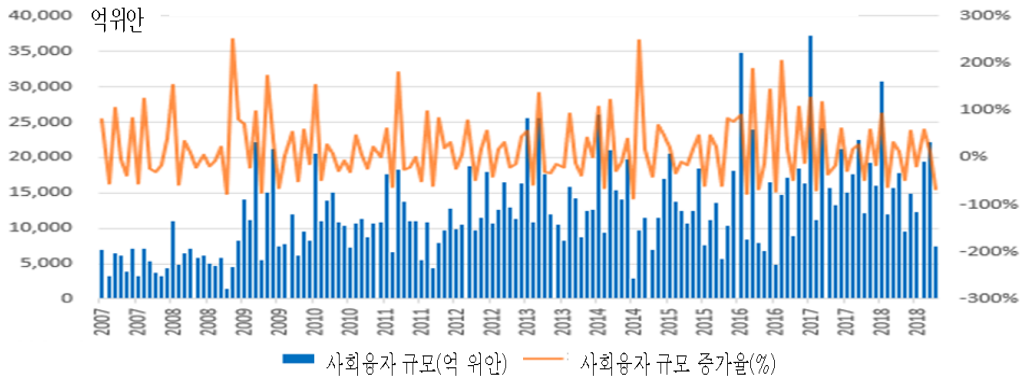
- 최신 통화정책 동향

◦ 통화정책은 △ (1분기)안정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실시 △ (2분기)안정적인 통화정책 중립성 유지, 유동성의 적절한 균형 △ (3분기) 통화 유동성 합리적 수준으로 충분히 유지 등으로 변화가 나타남.

◦ 통화정책은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압박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임. 주로 지준율 인하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실시함.

◦ 통화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부채감소-안정적 부채감소, 시스템 외 대출 축소, 사회융자 빠르게 감속, 시스템 내부 대출 증가, ② 금융리스크의 안정적 처리-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도덕적 리스크 유발, 지나치게 빠르게 처리할 경우 리스크 유발, ③ 환율시장화 견지(1997년 태국 금융위기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님) 등으로 판단됨.

그림 13. 사회융자 규모 및 증가속도(2007.1~2018.10)



- 최신 재정정책 동향

◦ 조세 관련 명목세율은 하락하였지만, 탈세와 누세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실제 조세부과는 강화됨.

◦ 최근 수 년 간 PPP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5년은 가속화 추진하였지만 2017년은 전면적으로 긴축됨. PPP에 대한 리우쿤(刘昆) 재정부 부장의 입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함.

◦ 지방채는 지방정부가 자체 발행하고 상환하도록 하지만 상업은행은 지방채를 국채(리스크 제로)로 간주함.

◦ 지난 10월 국경절 연휴 기간, 리우쿤 재정부 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를 언급하였음.

◦ 중국 재정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부에서 발표하고, 중앙은행이 실시한다는 것임.

❑ 현재 주의해야 할 5가지 관계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재세긴축과 금융완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주의해야 함.

- 거시경제정책 조정과 체제개혁

◦ 개혁 없이는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것임.

- 체제개혁과 대외개방

◦ 체제개혁 없이는 외자 유치가 어려울 것임.

- 체제개혁과 기술혁신

◦ 체제개혁 없이는 혁신할 수 없음.(교육체제, 연구체제)

- 체제개혁과 규모효과
  - 개혁 없이 대규모 혹은 집중소비에만 의존하면 대량 낭비를 초래할 것임.(예를 들어 광군제(11.11), 교육 인프라, 고속철도 등)
  - 성숙된 사회는 균형적이며, 안정된 소비를 해야 함.

3. 민영기업 정책의 중대 변화

❑ 얼마 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장

- 저우신청(周新城) 인민대학 교수: '소유제 소멸' 주장, 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의 공식 SNS 웨이보(微博)에 게재(2018.01)
- 우샤오핑(吴小平) 금융 칼럼니스트: '민영기업 퇴장론'(2018.09)
- 추샤오핑(邱小平)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기업 직원은 민영기업 경영에 동참, 민영기업의 발전성과 공유(2018.09.11, 항저우)
- 자본시장: 국진민퇴

❑ 정부의 민영기업 정책 전환

- 9월 이후 주요 지도자들이 민영기업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음.(표 3 참조)
- 11월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민영기업 좌담회를 개최하고 민영기업이 당면한 세수부담 완화, 융자난 해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에 대해 언급
  - 회의 후 주요 정부부처와 각급 기관, 지방정부가 잇달아 민영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민영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사상 처음임.(표 4, 5 참조)

표 5. 민영기업에 대한 주요 지도자 발언

시간	발표자	주요 내용
9.27	시진핑 국가주석	(동북3성) 국유기업이 '선도' 역할, 민영기업의 발전 반드시 필요
10.15	시진핑 국가주석	국유 군수기업 개방 유도, 민영기업 참여와 참여 비율 제고
10.19	리우허(刘鹤) 부총리	(4대 필수이행) 기본 경제제도 견지,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고도 중시, 정책 조치 심화 이행, 중소기업 및 민영기업 자생력 제고
10.21	시진핑 국가주석	민영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
10.22	시진핑 국가주석	(광둥) 민영기업, 중소기업 발전 위해 더 좋은 여건 조성 필요
10.22	리커창 총리	경영환경 개선 노력, 기업발전 제약 어려움 제거, 기업 신뢰 및 경쟁력 강화
10.31	시진핑 국가주석	현재 경제가 안정 속 변화 중이며,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고, 기업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여러가지 소유제 경영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필요
11.01	시진핑 국가주석	(민영기업 좌담회) 국제경제 환경 변화, 경제단계 전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않음. 기업세 수부담 감소, 민영기업 융자난 해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책실행 조정, 기업가 및 재산안전 보호에 대해 논의
11.08	시진핑 국가주석	정부는 양호한 경쟁 환경 조성, 민영기업 어려움 지원, 경제 운영의 합리적 구간을 확립할 것임.

표 6. 정부 기관 및 부처별 민영기업 지원정책

시간	정부 기관/부처	주요 내용
10.07	재정부	더 큰 규모의 감세와 더 뚜렷한 기업부담 경감 조치 검토
10.15	중국인민은행	G30: 국유기업에 대한 '경쟁 중립성' 원칙 적용 고려
10.22	국무원 금융위원회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가중치 증가, 직책을 이행하였지만 리스크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 면제
10.22	중국인민은행	민영기업 채권융자 지원 수단 구축, 민영기업 채권융자의 안정 촉진
10.26	증권감독위원회	여건에 부합되는 기구가 전문적인 기업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도록 지원, 이로써 민영기업의 융자난 및 상장회사의 증권담보 리스크 완화
10.27	증권감독위원회	11개 증권사가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증권산업의 공동자산 설립
11.01	중국인민은행, 북경은행보험감독국, 북경금융업무국	(베이징) '베이징 민영 및 소형기업 금융서비스 심화 관련 실시의견'
11.03	공상업연합회(工商联)	(베이징) 민영기업과 금융기구의 정보교류 추진, 민영기업의 질적 발전 단계 진입을 유도
11.04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 발전업무 영도소조 조율 메커니즘 촉진, 전자통신, 군수 분야에 대한 민영기업의 진입 애로사항 제거
11.05	시장관리감독총국	모든 시장 주체에 대해 무차별, 평등 대우
11.06	중국인민은행	신용대출 지원, 민영기업
11.07	은보감회	12.5': 신규 기업 대출 중 대형 은행의 민영기업 대출이 1/3이상, 중소기업은 2/3 이상 3년 후 은행의 민영기업 대출이 기업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이상
11.08	최고법원	민영기업가의 합법적 권익보호 확대
11.0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속히 제4차 혼합개혁시범 시작하고, 지재권 보호 및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보호 추진
11.10	세무총국	우수 납세기업의 무담보 대출 확대, 감세를 통한 기업의 해외경영 지원 확대 계획
11.10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금융기관의 소규모 영세기업 대출 이율 1%p인하
11.11	사법부	「민영기업발전 위한 법치환경 조성 의견」 20조 실시
11.15	상무부	민영기업의 유통혁신 지원, 소비확대 촉진, 우수 민영기업 해외진출 지지

표 7. 주요 기관/지방정부별 민영기업 지원정책

시간	급	기관/지방정부	주요 내용
10.16	기관	중국공상은행	본사 대 본사 협력MOU(总对总合作协议)' 체결, 기업을 위해 '융자+금융스마트(融智)'의 전면적 금융서비스 제공
10.22	기관	우체국은행	확고부동하게 민영기업 발전 지원
10.26	기관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구제용 전문채권(纾困专项债) 발행
11.02	성급	국유자본운영회사	(저장) '저장성 신흥동력기금' 설립
11.03	성급	상하이시정부	(상하이) 100억 위안의 상장회사 구제용 기금, 100억 위안의 신용 및 담보대출 제공, 100억 위안의 담보 기금 확대
11.05	성급	장쑤성정부	(장쑤) 28조항의 조치를 통해 실물경제의 질적 발전 지원
11.07	성급	은행간 시장거래상협회	(저장) '저장 민영기업 채권 융자수단 협력 계약' 체결
11.09	기관	농업은행 산둥분행	(산둥)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민영기업 융자난 해소
11.11	성급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금융기구가 소형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금리 평균 1%p 하락
11.11	성급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상하이) '민영기업 채권 융자지원 수단' 발행 방안
11.12	성급	광저우 인민대표상임위원회	(광저우) 민영경제 발전 지원의 구체적인 실천
11.13	성급	베이징 시장	(베이징)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 발표, 기업부담 경감 정책 실시, 민영기업 융자난 완화
11.14	기관	선전증권거래소	창업판 개혁, 런던거래소 및 토론토거래소 등과의 협력 심화
11.14	성급	공상업연합회	(헤이룽장) 성내 민영기업, 특히 중소 민영기업의 채무 연체 현황 통계 시작
11.15	성급	성급 시장관리감독위	(허베이) '경영 자격증 감소, 허가증 감소(减证照, 压许可)'

❑ 그렇지만 민영기업에 대한 정책 조정 시기는 다소 늦은 편

-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영경제를 중시하더라도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것임.
- 기존 경기둔화는 외부요소(무역전쟁) 보다 내부요소(정책오류)가 주요원인임.
- 무역전쟁의 결정권은 중국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정책과 특히 민간기업 정책은 중국 스스로 결정함.

4.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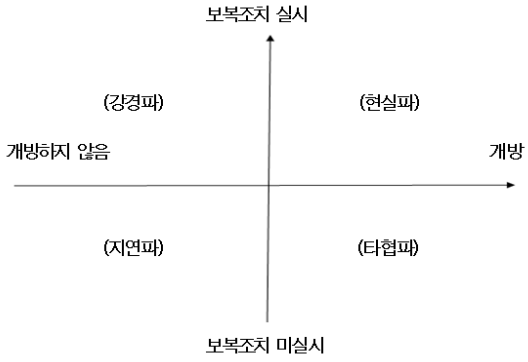
❑ 중·미 무역전쟁에 대한 정책대응

- 현재 중국 국내에서 중·미 무역전쟁에 대한 정책대응은 주로 보복조치 실시 여부와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4가지로 나뉨.

표 8. 중·미 무역전쟁에 대한 4대 정책대응 방안과 주요 내용

방안	주요 내용
강경파	보복조치 실시 및 개방 하지 않는 것을 주장
현실파	보복조치 실시와 동시에 개방을 주장
지연파	보복조치 미실시, 개방 하지 않는 것을 주장
타협파	보복조치 미실시, 개방을 주장

그림 14. 중·미 무역전쟁에 대한 4대 정책대응 방안



자료: 国际经贸在线

❑ 금융시장 개방 이유

- 이론분석
  - 개방이 폐쇄식 보다 더 안전함. 개혁개방 전의 '공업시스템'은 개혁개방 후 모두 새로 시작하였는데 그 원인은 바로 경쟁력 부족임.
  - (금융 개방개혁 순서) 일본은 우선적으로 금융 개혁을 추진한 후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추진되었음. 중국학자 황이핑(黃益平)은 금융서비스업 개방순서를 금리 시장화에서 환율 시장화, 그 후 자본 이동으로 점차 추진해야 함을 제시함.
  - 금융업은 경쟁성 서비스 분야와 공공재로 구분되는데, 그중 상업은행은 경쟁성 서비스 분야로서 경제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고, 정책성 은행은 공공재로 사회효율 극대화를 추구함.
- 역사적 경험

◦ 청나라는 쇄국정책을 실시해서 낙후된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국가에 비해 발전 수준이 뒤떨어지면서 수모를 겪게 되었음.
◦ 이후 중국은 개방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개혁성과를 이끌어 냄.
◦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도 중국은 개방을 지속하였으며, 대외개방이 없었다면 현재 중국 금융업의 휘황찬란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것임.

- 대세적 흐름: '신시대'의 기본특징: 인터넷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세계화

◦ 인터넷화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는 결제 기반 확대를 추진했으나 결국 알리페이(支付宝)에 의해 대체됨. 아울러 오늘날 인터넷이 끊기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임.
◦ 디지털화도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스마트화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리더로 나서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전제 조건은 인터넷 개방과 새로운 사상해방임.
◦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공간적 거리 단축, 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시간 단축, 스마트한 통번역 설비 등장에 따른 문화적 거리 단축 등으로 인해 세계화 궤도로 재진입할 전망임.
◦ 절대로 인터넷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세계화 된 '신시대'에서 쇄국정책을 실시해 청나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 현실 교훈

◦ 금번 중·미 무역전쟁에서 양국 모두 전략적 판단착오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① 중국 내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중국 국민이 중국에 대한 외국의 인식 변화를 모르며, ② 미국이 중국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임.
◦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2위로 부상하였으나 1인당 경제규모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① 개인상품 공급 과잉과 공공재 공급 부족 ② 저부가가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고부가가치 기술력 미약 ③ 절반은 선진국과 절반은 개도국 ④ 절반은 계획경제와 절반은 시장경제 ⑤ 절반의 현대화와 절반의 현대화 이전의 수준 ⑥ 소수 부자와 다수 빈민 등 6대 구조적 갈등이 존재하지만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희소식만 보도함.

❑ 시진핑의 새로운 대외개방 조치

- 시장진입 기준 대폭 완화

◦ 2017년 말 은행, 증권·보험업의 외자 지분제한 완화 조치 실시
◦ 보험업의 개방 가속화, 외자 금융기구 설립 제한 완화, 중국 진출 외자 금융기구의 업무범위 확대, 국내외 금융시장 협력 분야 확대
◦ 외자 지분비율 제한 완화 추진, 특히 자동차 산업의 외자제한 완화

- 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의 연계 강화,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법집행 견지, 경쟁 권장, 독점 반대
◦ 2018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수정,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실시

- 지재권 보호 강화

◦ 올해 국가 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을 신설하고 법집행력과 단속효과를 제고
◦ 국내외 기업의 정상적인 기술교류 및 협력을 권장,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합법적 지적재산권 보호

- 능동적인 수입확대 노력

◦ 2018년 자동차 수입관세 대폭 인하 조정, 이와 동시에 기타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 인하 조정
◦ 주민 수요가 높은 특색 우위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WTO의 '정부조달협정'도 조속히 가입

◦ 2018년 11월 상하이에서 중국 최초의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개최할 예정임. 이는 일반 전시회가 아니라 중국의 능동적인 시장개방을 알리는 중요한 정책적 발표와 행동임.

- 대외개방 관련 시진핑 주석의 요구사항

◦ 최근 발표한 일련의 주요 대외개방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 늦는 것보다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좋고, 천천히 추진하는 것보다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좋음.
◦ 중국기업과 국민이 하루 빨리 개방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나아가 세계 기업과 국민 모두 중국의 개방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함.

❑ 금융 개혁개방의 최신 동향

- 금융 감독관리 체제

◦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신규 설립,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위')로 일원화

- 금융부문의 고위인사

◦ 리우허(刘鹤, 부총리), 이강(易纲, 인민은행 행장), 궈수칭(郭树清, 은보감위 주석) 등 오랫동안 금융개혁을 추진해오던 전문가들이 경제 주요 분야 담당자로 임명

- 금융 대외개방의 3대 원칙(이강 행장)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원칙
◦ 금융업 대외개방은 환율 메커니즘 개혁과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진행 속도와 조율해서 공동 추진
◦ 개방과 동시에 금융리스크 방지를 중시, 금융 감독관리 능력과 금융개방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 금융개방 리스트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대외개방 '네거티브리스트(2018)' 발표
◦ 과거 정부는 수많은 약속 중에 일부만 지켜 신용도에 영향을 주었음.
◦ 정부는 금융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수동적 국면을 바로 잡고 인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언론행위를 삼가고, 약속 이행률을 높여나가야 함.

❑ 금융 개혁개방의 중점 분야

- 대외개방과 국내개방

◦ 민영은행과 관련해서 국내개방을 조속히 추진하고, 민간자본을 시스템 내에서 감독 관리해야 함.
◦ 상업은행과 관련해서 국유화를 제거하고, 정부내부 최대 '관계자간 거래'를 단절해야 함.

- 금융개방과 저축보험

◦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자본금은 국가 재정 · 인민은행 · 중앙후이진(汇金)투자공사가 각 1/3씩 출자해야 함.
◦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으면 금융기관의 부담이 크고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으면 자금 준비에 긴 시간이 필요함.
◦ 인력, 재력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준비 필요

- 대외개방과 감독관리 강화

◦ 산업 감독관리 강화, 감독 관리의 중립원칙을 지켜야 함.
◦ 경쟁정책 실시, 차별적인 금융정책을 취소해야 함.

5. 산업전환 가속화

❑ 중국의 경쟁을 제한하는 주요요인

- 패왕적 행정 독점이 시장경쟁을 억제(진입제한)
- 선별적 산업정책이 공정경쟁을 저해(편향된 지원)
- 봉건식의 지방보호가 통일된 시장 구축을 방해(현지기업 배려)
- 과잉보호식 국유기업 정책으로 인한 비국유기업의 지위 하락(국유기업의 '어른아이(巨嬰, 어른의 몸이지만 생각은 어린 아이 수준의 미성숙한 사람을 지칭)')
- '구조적 거시경제정책 조정'으로 인한 국진민퇴 악순환(과열시 민간기업 억제, 경기둔화 시 국유기업 보호)
- 차별적 금융정책이 기업간 공정경쟁을 방해(민간기업은 세수의 50%, GDP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지역 취업 80%, 기업수의 90%를 담당하나 반면 융자 비중은 20%에 불과)
- 차별적 '수출지향' 정책으로 인한 기업간의 극심한 불공정(수출 세금환급, 외환 메커니즘)
- 분산된 경쟁정책 메커니즘은 경쟁의 불충분, 불공정 현상을 억제하기 어려움(기구 개혁전: 이중 일탈, 삼자대립)

❑ 산업정책 자체의 전환

- 우징롄(吴敬琏)은 산업정책은 보존과 폐지여부 문제가 아니라 전환 방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
  - 중국의 산업정책은 △ 강성(刚性)에서 융통성(柔性)으로 △ 종적에서 횡적으로 △ 선별적에서 기능성으로 △ 편향성에서 경쟁성으로 △ 국가이익 위주에서 국제규범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함.

❑ 산업정책은 경쟁정책으로 전환

- 정책의 라이프 사이클
  - 계획경제 시기 지령성 계획을 핵심으로 기타 정책을 조율 및 통합, 실시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임.
  - '계획적 상품경제' 시기 산업정책을 핵심으로 기타 정책을 조율 및 통합, 실시하는 기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임.(일본 경제산업성 = 중국 공업정보화부 + 상무부)
  -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경쟁정책을 핵심으로 기타 정책을 조율 및 통합, 실시하는 기관은 경쟁정책위원회임.(반독점위원회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 강화 이유

- 경쟁정책의 기초지위 확립은 대세적 흐름
  - 90년대 이후 국제적 흐름을 보면, 현재 140개 국가가 경쟁정책의 기초지위를 확립하였음.
  - 국내적으로 낡은 독점형식을 근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플랫폼 독점현상이 연이어 발생하였음.
- 경쟁정책의 기초지위 확립은 핵심 중의 핵심

◦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의 독점 반대 취지는 정치적 목표이며, 독점 반대가 원활하지 않은 중남미 국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짐.

◦ 중국 국내적으로 중진국 함정 탈출 여부와 관련 중요한 시기에 진입

- 경쟁정책의 기초지위 확립이 급선무

◦ 국제적으로 경쟁정책의 미흡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획득을 저애하는 것임.

◦ 국내적으로 경쟁정책 강화는 생산과잉 해소, 금융리스크 방지, 거시경제의 안정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

❑ 경쟁정책이란 무엇인가?

- 경쟁촉진: 독점반대
- 규범화된 경쟁: 부정경쟁 반대
- 경쟁정책 심사

그림 15. 독점행위 분류 및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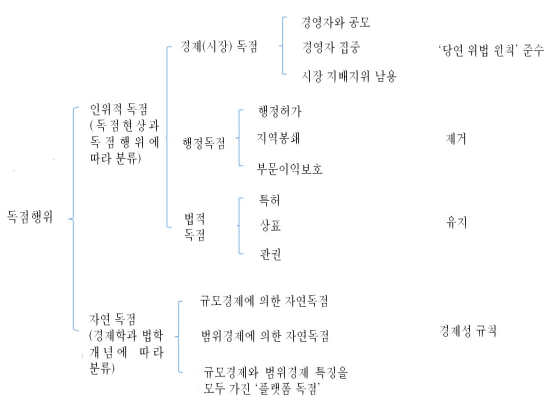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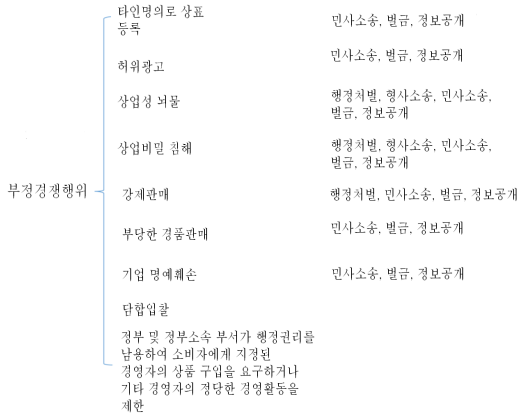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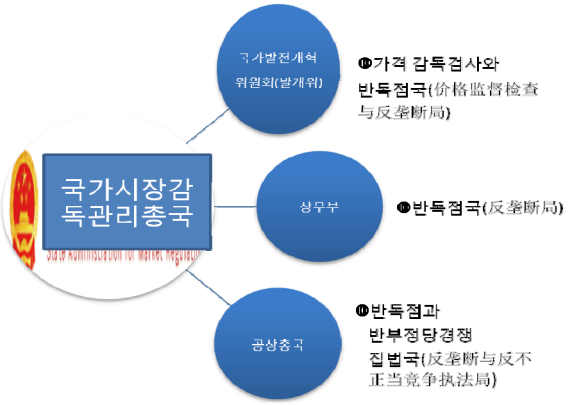
그림 16. 부정경쟁행위 분류 및 입장



❑ 정부의 최근 조정안

- 19차 당대회에서는 행정성 독점 제거, 시장독점 방지, 통합시장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과 방법을 폐지할 것을 제출함.
- 19차 3중 전회에서 정부의 반독점, 반부정당경쟁 직능 강화 및 고도화, 행정성 독점 제거, 시장독점 방지, 통합시장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과 방법을 폐지할 것을 제출함.
- 이번 개혁에서 기존 3개 법집행 기관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하였음.(원래 등급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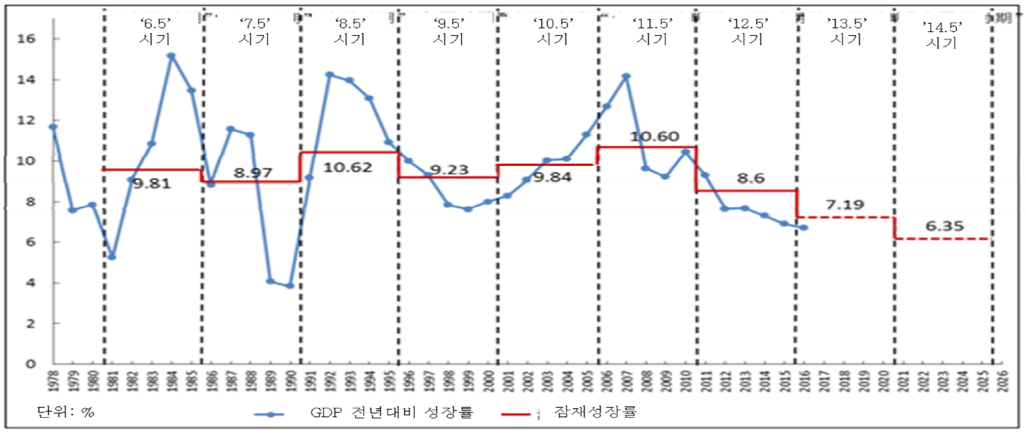
그림 17. 반독점기관 직능의'삼위일체'



❑ 결론

- 지난 40년간 중국경제의 성장규칙을 보면 사상해방 이후 개혁개방이 추진되고, 이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함.
- 2018년 1월 23일 시진핑 주석은 사상을 다시 해방하고, 개혁을 심화하며, 업무를 내실화할 것을 제기함.
- 중국경제는 새로운 성장을 이루고 새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8. 중국경제 성장률 변화추이(1978~2026년)



질의응답(Q&A):

질문 1.

중국 국내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신호 중 안정적이 취업이 1위라고 하셨는데 중국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경기부양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지만, 수출이 불안정한 현시점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더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채 발행 증가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임. 한편 10년 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외부충격에 대응하고자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는데, 현재 중국정부가 직면한 부채 등의 문제점은 당시 경기부양책과도 연관됨. 만약 경기부양책 실시로 예상되는 지방 부채 등 금융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한 현재 민영기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가능해 보임. 이와 관련해서 국유기업 개혁 조치가 발표되거나 실시되고 있는가?

답변 1.

개인적으로 2003년부터 지방정부 부채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중앙정부에서는 10년이 지난 2013년이 돼서야 지방부채 문제를 중요시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예산법 수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가 발행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급 정부만 가능함. 그러나 실상 인프라 투자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시급 이하의 행정구역임. 따라서 대출 제공자, 대출 사용자, 대출 상환자가 각각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개인적으로 시급 정부가 자체 발행할 수 있도록 권리 이양이 필요해보임. 지방정부가 자체 발행하고 상환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전혀 연관이 없게 될 것이고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을 더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이며, 리스크가 큰 채권은 매입자가 적을 것임. 현재 지방정부 채권발행 메커니즘은 10년 전 중앙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과 다름. 또한 지방정부는 PPP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 절차도 포함시켰음.

개혁에 있어 국유기업이 핵심 중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제19차 당대회에서 국유기업을 '크게, 강하게' 육성하는 방침에서 국유자본을 '고도화하고 크게, 강하게'라는 방침으로 변경함. 시진핑 주석은 앞서 산둥성 시찰 시, 국유기업에 현대화 기업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국유기업의 국유지분을 양로보험에 포함시키는 등 방법이 있음. 1990년대에 우징롄(吴敬琏) 교수가 처음으로 제시한 방안인데 산둥성에서 시범 추진하였으며, 성과가 좋아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또한 연초에 국무원에서는 매년 전인대에서 국유자산 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국유기업 개혁 방안으로도 볼 수 있음.

질문 2.

앞서 말씀하신 분석에 공감하지만, 향후 중국이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특히 중국의 인터넷 차단 등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언급한 6가지 구조적 갈등을 과연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인가?

답변 2.

중미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 국내에서는 아직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입각하여 논의하지는 않은 상황임. 하지만 지금 문제점을 계속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있음. 만약 정부에서도 인터넷 차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중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 사실 지금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도 웨이보나 위챗 등을 통해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중국 국내 인터넷은 언젠가는 개방될 것임. 하지만 이러한 개방과정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함. 아울러 인터넷 개방은 정부 거버넌스 능력의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함. 중국은 철도, 도로, 건물 등 하드웨어 능력은 막강하지만 소프트웨어 능력은 약함. 하지만 중국은 더 이상 문화대혁명 시기와 같은 쇄국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임. 특히 최근 북한, 쿠바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있는데 중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질문 3.

최근 시진핑 주석이 민영기업 좌담회를 개최한 후 중앙은행과 은보감회에서도 민영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음. 민영기업 지원이 강화되면 국유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 민영기업 대출이 증가한다면 채무연체 등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변 3.

사실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은 높지 않음. 국유기업은 주로 전방산업 독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 그 외에도 부동산, 민영기업의 권리 박탈(예를 들어 국유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민영기업에게 도급을 주기도 하는데 프로젝트 완공된 후 민영기업에게 대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유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후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민영기업에게 재대출 하는 경우 등)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음. 즉 주영업활동은 독점을 통해 이익을 내고, 기타 업무를 통해서도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님. 따라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렇다고 해서 국유기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유기업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이 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현재 자금조달은 모두 시장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민영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할지라도 상업은행은 리스크 평가 후 제공여부를 결정할 것임. 아울러 은행이 국유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때 직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민영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때는 은행직원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임.